

尹 “靑 이전비 1조, 근거 없어 496억원 추산…與, 무속 더 관심”

“예비비·이전 문제는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정부에 협조 요청할 생각”

與, 전략자산 이전과 군 부대 이전 비용 등 수천억원 비용 제외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 이전 비용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될 경우 총 소요예산을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여기에 군 전략자산 이전과 군 부대 이전 비용 등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비용이 제외된 것이라는 여당의 비판이 나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리모델링과 집기류 교체, 경호용 방탄창 설치 등의 비용으로 2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9700만원이 책정됐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352억3100만원에 달한

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청와대 대신 머물게 될 한남동 공관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2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합참건물로 이전 등 기존 임주기관 이전비용은 118억35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청와대 이전비용으로 인한 예산은 약 496억원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지금 1조나, 5천억이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다”며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진도 간단

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며 “비용 또한 전체 비용을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을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예비비 예산 범위 안에 있는 지, 국회 동의를 필요한지에 대해 윤 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하고 다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 한 것”이라며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쪽에서 청와대 이전 배경으로 풍수지리나 무속 논란을 제기하는데 대해 “대선 과정에서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어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청와대 이전)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다”며 풍수지리나 무속을 맹신한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환기자

정의당, 靑 용산 이전 “대책 없이尹당선인 의지만 앞세운 졸속”

“첫 국정 행보, 민생 아닌 집무실 논쟁…실망”



정의당은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당선자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을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윤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나, 용산이나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위중증 환자 급증은 물론 하루 사망자 최대치를 경신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소통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민주,尹에 “공약 파기·안보공백·월권·1조 비용” 맹폭

“졸속 추진이 낳을 혼선·부작용에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공약 파기·국정 혼란·과도한 예산·안보 공백 등 이유를 들며 심자포화를 퍼부었다. 당초 윤 당선인의 ‘국민 소통’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맹폭했다.

고원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낮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을 위한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절차도 일방통행”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졸속 추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며 “윤 당선자는 제약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약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 컨트론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론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이라며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무엇보다 이러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국민과 소통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을 망각한 것 같다”며 “청와대에 들어가면 율길 수 없다는 윤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이전은 결코 시간에 쫓기듯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약 파기’, ‘소통 부재’, ‘월권’ 등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공약 첫 번째 파기, 공약 자체가 졸속·부실하게 만들어진 것 자인한 꼴”이라며 “용산 국방부로 이전 결정 또한 졸속·부실한 결정이면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보는 듯하다. 너무 걱정”이라고 맹폭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자의 청와대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는, 국민과 좀 더 소통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가장 먼 결정”이라며 “소통은 경청에서 비롯됨에도 수많은 국민의 반대도 경그리 무시했다. 소상공인들도

황망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청사가 어디 윤 당선자 5년만 쓰고 버릴 집이나”며 “국방부 추산으로도 5000억원의 이전 비용, 안보 현안 대응 및 각종 안보 자산 이전 등 안보 불안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취임도 안 한 당선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선제타격 할 줄은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성식 의원은 “결국 독불장군에 불통대장이 되겠다는 것인가. 윤 당선인의 불법적, 불공정, 비사실적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다”며 “인수위법 어디에도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특정부처의 이전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무소불위의 일방적 권력 행사를 하려 들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어떤 예산의 집행 권한도 없다. 편성조차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불법이 된다”며 “대통령의 최우선 의무인 국가 안위를 버리고, 본인 사무실을 차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행태에 모든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고 곧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